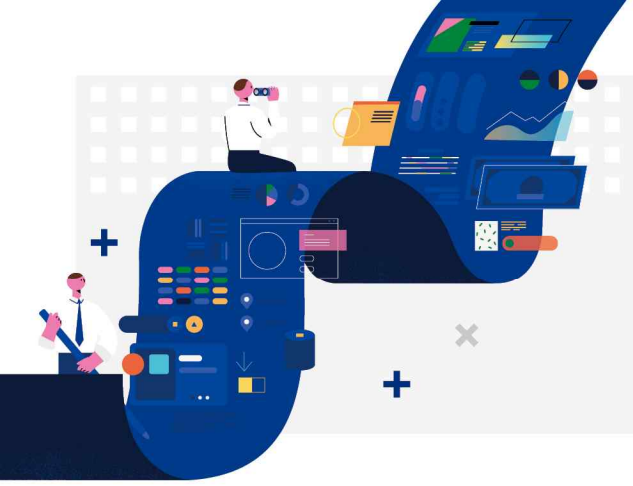
ISSN 3022-8514(Online)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5-04호 (2025.04.25)

- **이 슈**
  (산업)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는 금융·기술 부문의 변화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5-04호 (2025.04.25)

Cotents

Ⅰ. 이 슈

(산업)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는 금융·기술 부문의 변화 ····· 1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 10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정부, 12조 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마련하여 국회 제출 ····· 11

(경제) 5월 1일부터 변경된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적용 ····· 11

(금융) 금융위, 지역·서민금융 부문에서의 저축은행 역할 확대 추진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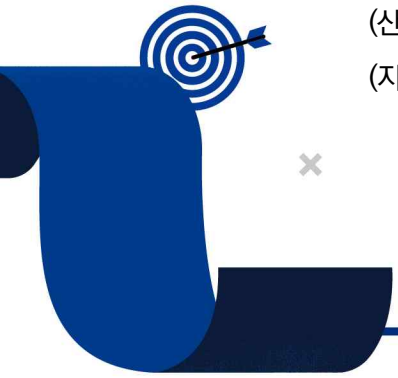
(금융) 보다 저렴하고 도움되는 5세대 실손보험, 2025년 말 출시 계획 ····· 12

(산업) 산업부,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 13

(산업) 정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선점을 위한 관련 분야 투자 확대 ····· 13

(산업) '2025년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신청 기한 오는 5월 12일 마감14

(지역) 스마트서비스 개발·실증할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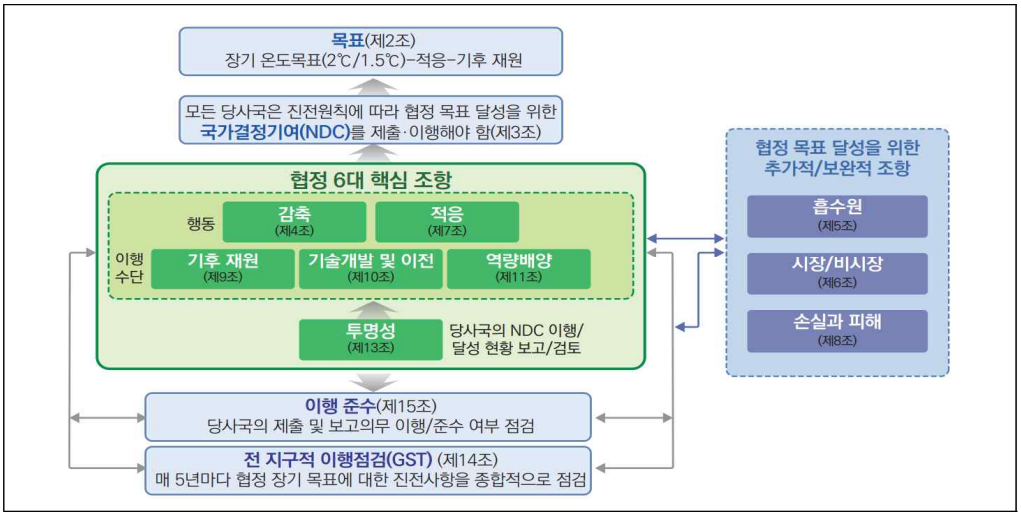
상민경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산업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는 금융·기술 부문의 변화

#탄소중립 #산업부문 변화 #녹색금융 #기후테크 #신시장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확대하고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

- 1992년 리우정상회담[1]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전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가 설립
  - UNEP FI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대응을 위한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로, △사업 재편 △온실가스 배출 제한 △순환경제 촉진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을 규정
- 국제사회는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COP)[2]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며,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에 따라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보편적 체제를 마련
  -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의 기온상승 제한 노력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저배출 기술 확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흐름(금융) 등을 포함해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 자료 : 환경부(2022)

〔그림 1〕 파리협정 구조

1) 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 금융 부문은 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여 전 세계의 탄소중립 행보에 동참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투자를 수행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

- UNEP FI는 ①환경 개선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 ②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활동을 '녹색금융(Green Financing)'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파리협정에서 등장한 '기후금융(Climate Finance)[3]'을 포함하는 개념
- '녹색금융'이란 환경문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수익과 환경적 편익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산업 전환 등에 자금을 제공하는 활동을 포괄
  - 채권·주식·보험·펀드·대출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녹색금융 상품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투자·참여를 유도하는데, '녹색채권[4]', '녹색자산유동화증권[5]' 및 '임팩트 투자'[6] 등이 주변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녹색금융 사례
-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Market.us(2024)에 따르면 전 세계 녹색금융 시장의 규모는 21.7%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며, 2023년 3.19조 달러에서 2033년 22.75조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
  - 유럽의 EU 탄소국경조정세 및 EU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EU SGDR), 미국의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중국의 녹색채권 기준 등 주요국의 환경 관련 규제·정책 강화가 녹색금융 시장의 확대를 견인
- 주요국 정부는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를 통해 친환경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녹색금융 및 기후테크의 범위를 구분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목적으로 활용
  - EU는 2019년 채택한 'EU 택소노미 규정(EU Taxonomy Regulation, TR)'을 근거로 6가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4가지 판단기준[7]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EU 녹색분류체계 규정(Green Taxonomy Regulation)'을 발표[8]
  - 일본은 공식적인 그린 택소노미 개념은 없으나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 및 '기후 전환 금융 기본 가이드라인' 등 녹색산업으로의 자본흐름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2년 녹색 신용 통계

---

3) 파리협정문에서 언급된 '기후금융'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개도국의 기후적응 사업에 투자·보증·증여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4) 녹색채권(Green Bond)은 친환경 프로젝트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용 채권으로, 발행·유통의 구조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지만, 조달된 자금을 반드시 친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 우리나라 환경부는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면서 자금의 △사용 △평가 및 선정 절차 △관리 △보고 등 핵심요소를 충족하는 채권을 '녹색채권'으로 규정.

5) 녹색자산유동화증권(Green Asset Backed Securities)은 일반적으로 녹색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등의 증권 또는 증서를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친환경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금융기관의 신용 보강을 통해 유동성을 높여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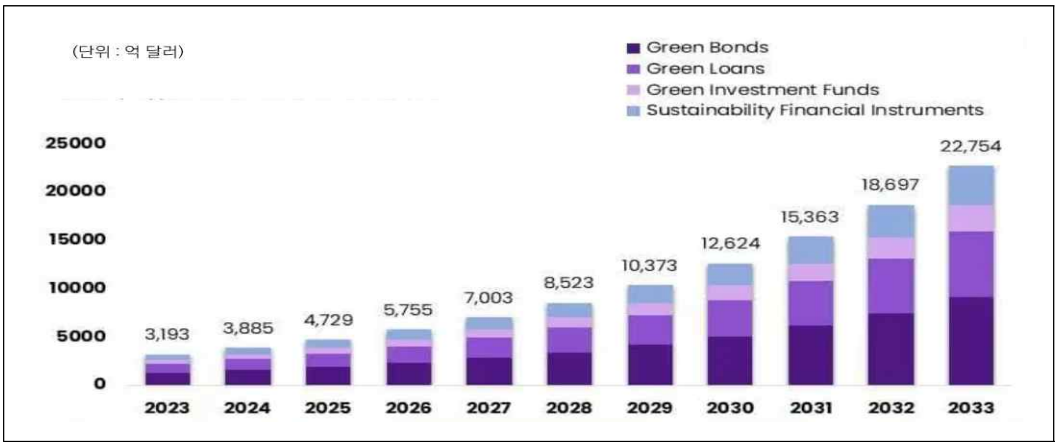
6)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란 사회적 영향력·파급력을 의미하는 '소셜임팩트(Social Impact)'와 '금융투자(Finance Investing)'의 합성어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 또는 펀드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함.

7) EU의 6대 환경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이며, 4가지 판단기준이란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기술적 선별 기준에 부합 등.

8) 'EU 택소노미 규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녹색분류체계의 벤치마크 모델로 이용되고 있으며, U 녹색분류체계 규정'은 2개 부문 6개 목표, 13개 산업 분야의 94개 경제활동으로 구성.

양식 도입 이후 '녹색 채권 승인 프로젝트 카탈로그' 및 '녹색산업 안내 카탈로그' 등을 발행 중

-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저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위해 전담기관인 '그린뱅크'를 설립하고,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등에 대해 투자를 진행
  - 그린뱅크는 친환경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규 기술 및 프로젝트 투자 활동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준)공공 또는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미국의 그린뱅크(GB) △영국의 녹색투자은행(GIB) △호주의 청정에너지 금융 공사(CEFC) 등이 주요 사례[9]



* 자료 : Market.us(2024.08)

〔그림 2〕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전망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회 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을 감축하거나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테크(Climate Tech)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될 전망

- 기후테크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통칭하는 단어로, 기관에 따라 분류 기준에 차이
  - UNFCCC(2016)는 기후테크를 ①자원의 활용을 줄이거나 온실가스 흡수를 증대시키는 '온실가스 완화기술'과 ②현재 발생 중이거나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기후변화 적응 기술'로 구분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4)는 기후테크를 △클린테크(Clean Tech) △카본테크(Carbon Tech) △에코테크(Eco Tech) △푸드테크(Food Tech,) △지오테크(Geo Tech) 등 5개 분야로 분류
- 주요국은 탈탄소화 또는 저탄소 신기술에 대한 R&D 및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기술 센터 및 네트워크(CTCN)', '미션 이노베이션(MI)', '글로벌 기후행동 파트너십(GCAP)' 등 국제협력[10]을 통한 기후테크 확산 및 협력 추진

9) 각각 Green Bank, Green Investment Bank,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의 약어임.
10) 기후기술 센터 및 네트워크(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는 국가 및 기후테크 솔루션 간의 연결, 기후테크 기술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는 국제협력기구이며, 미션 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은 청정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임. 글로벌 기후행동 파트너십(The Global Climate Action Partnership)은 각국이 기후공약(NDCs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의 국제 협력체임.

- 미국의 경우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Industrial Decarbonization Roadmap), 탄소 음성화(Carbon Negative Shot) 프로젝트, 첨단 제조 및 재활용 프로그램(Advanced Manufacturing and Recycling Program) 등 탈탄소화 및 저탄소 기술개발을 지원
- 2023년 EU는 △탄소중립산업법(NZIA) 제정 △청정기술 생산에 대한 투자·보조금 확대 △청정기술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럽 그린딜 산업 계획(EU Green Deal Industry Plan)」을 발표하여 기후테크 산업을 지원

- World Economic Magazine(2024)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 규모는 △환경문제 증가 △주요 선진국의 환경 규제 △ESG 공시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추세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약 23.7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3년 19.3백억 달러에서 2033년 162.2백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
  - PwC(2024)에 따르면 2022~2024년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차입비용 증가로 인하여 전반적인 기후테크 분야의 투자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AI 기반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는 추세

〔표 1〕 우리나라 기후테크 5대 육성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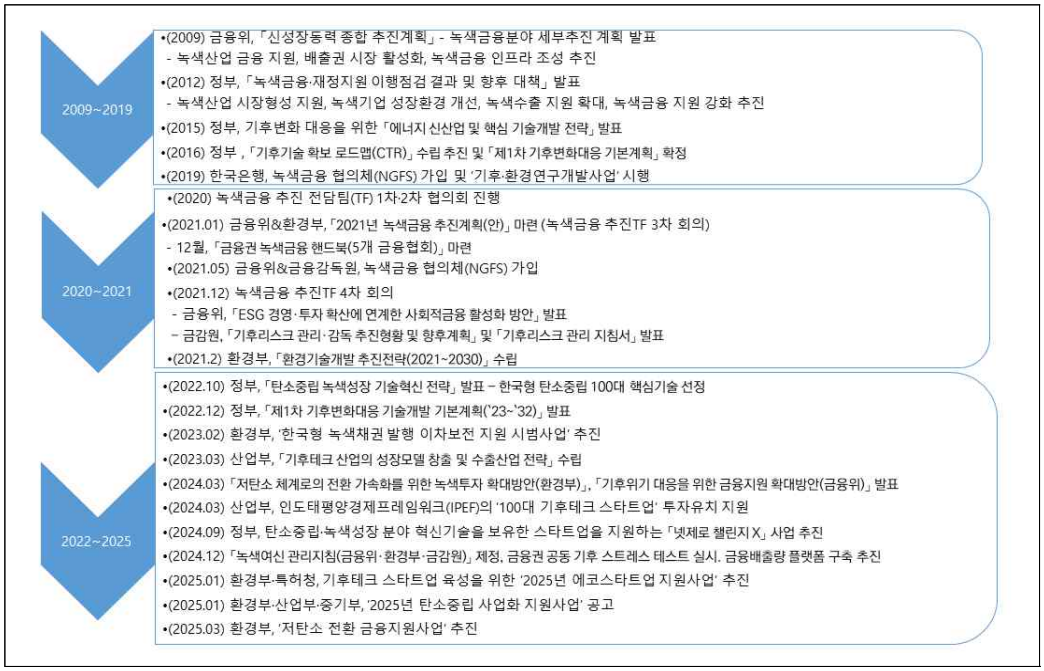
구분	개념	주요 부문	관련 기업 사례
클린테크 (Clean Tech)	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생산·분산화	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탈탄소에너지 등	• 해줌(가상발전소 시스템, KR) • Ateios Systems(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US)
카본테크 (Carbon Tech)	공기 중 탄소의 포집·저장·감축 기술	탄소포집, 공정혁신, 모빌리티 등	• Oxylus Energy(CO_2의 대체연료 전환, US) • Mitico(산업용 CO_2 포집 장비, US)
에코테크 (Eco Tech)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 제품 개발	자원순환, 폐기물 절감, 업사이클링 등	• 테라블록(고순도 재생 TPA, KR) • 도원바이오테크(생분해성 플라스틱, KR) • BEE biofuel Namibia (폐기름 활용 바이오연료, NA)
푸드테크 (Food Tech)	식품 생산·축산·농업 등 부문에서의 탄소 감축	대체식품, 스마트식품, 애그테크 등	• Impossible Foods(식물성 대체육, US) • FRAM66(아쿠아포닉스[11], HK)
지오테크 (Geo Tech)	탄소 관측·모니터링,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	우주·기상, 기후적응, AI·데이터·금융 등	• Carbonfuture(탄소 모니터링 시스템[12], DE) • Zero44(해운산업 CO_2 비용 관리시스템, DE) • 나라스페이스(탄소관측 초소형 큐브 위성, KR)

* 자료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4.02), TRELLIS(2024), Climate Insider(2023.07) 등 참고 및 재작성
* 주 : 주요 사례 기업 괄호 안의 내용은 기업의 기술(생산품) 분야 및 국가를 표기

11)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란 물고기 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droponics)를 결합한 기술로,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이용해 식물을 수경재배하는 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의미.
12) digital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dMRV) system.

○ 우리나라 역시 기재부·금융위·산업부·과기정통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공공·민간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녹색금융과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수행

- 중앙정부는 2009년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에서 '녹색금융'을 신성장동력 17개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한 이후, △녹색금융 추진TF 운영 △글로벌 녹색금융 협의체(NGFS)[13] 가입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녹색채권 발행 지원 등 국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활동을 지속
  - 2024년 3월 금융위는 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기후테크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환경부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는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추진
- 기후테크와 관련해서는 2022년 향후 10년간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부처의 R&D 정책 및 사업을 체계화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을 발표한 이후 연도별 시행계획[14]을 마련하여 R&D 및 정책 사업을 추진 중
  - 또한 2025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넷제로 챌린지X'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



* 자료 : 관련 정부부처 보도자료 참고 및 재구성

〔그림 3〕 우리나라의 녹색금융 및 기후테크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3)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은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로,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감독 △기후변화의 거시경제 및 금융 영향 △기후·환경 리스크 관련 데이터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

14) 2025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①온실가스 감축(무탄소에너지 생산 확대,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등) ②기후변화 적응(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 기후 적응형 도시·인프라 구현, 재난·재해 관리 등) ③혁신생태계 조성(산업 활성화 생태계 구축 등)의 3대 전략 분야에 중앙부처·지자체·민간 합동으로 약 2조 7,496억 원을 투자할 계획.

○ 인천시는 녹색금융 및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양호한 편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비전 달성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인천시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천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녹색기후산업 육성 △국제기구 협력·지원 △인천환경교육센터 운영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2022년 인천 서구가 환경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특화사업(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관리)의 우수기술 발굴 및 R&BD를 연계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송도에 위치한 녹색기후기금(GCF) 등 녹색금융 국제기구의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
  - 2023년부터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및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탄소중립 준비를 위하여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교육과 함께, 탄소중립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온실가스 감축 방법을 안내하는 컨설팅사업을 진행 중
  - 2024년 4월에는 2045년 인천시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하여 △저탄소 경제-생태도시 조성 △맞춤형 시민 기후행동 확대 △글로벌 기후협력체계 활성화 △안전한 기후위기 적응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의 15대 추진 과제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15)]
- 인천시는 현재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국제 녹색금융기구(GCF 등)가 위치해 있으며 국내외 녹색금융·산업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지역의 환경·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녹색금융 및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우선 인천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생산거점지구(검단2산단)가 2025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만큼 해당 지구의 기후테크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유인책의 마련이 요구
  - 향후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자리할 기후테크 기업의 금융 편의 증진과 신생 기술사업화 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서는 △녹색금융 펀드 마련 △기후테크 R&D 대출이자 할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역 내 녹색금융 활성화가 요구[16)]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인천테크노파크 등 지역·산업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후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R&D·사업화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지역 상황 맞춤형 기후기술을 개발·상용화할 수 있다면, 인천시의 2045 탄소중립 비전 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인천 송도의 GCF 사무국 및 KDB산업은행, KOICA 등 공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 수요 기후기술을 발굴하고, 인천시에서 해당 기후테크 산업 분야에 대한 R&D·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

15) 인천시는 동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가구 탄소중립포인트제 △영흥화력 무탄소 조기 전환 지원 △탄소배출 관련 교육 확대 등 사업과 더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

16) 예를 들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5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같은 녹색금융 사업을 인천시 현황에 맞게 재구조화해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화장품 #기타 화장품 #의약품

○ 2025년 3월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은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및 지속적인 기초화장품 수출 성장세 등으로 인해 2개월 연속 수출 증가[17)]

- 화장품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4.4% 증가한 966백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수출액이 증가하여 설 연휴로 인해 수출액이 감소했던 1월 이상의 금액을 회복
  - `25년 1분기 수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24년 1분기보다 13.0% 크게 증가하였으며, 품목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인체세정용품 순
- 바이오헬스 부문은 △위탁생산(CMO) 수출 지속 △미국·유럽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확대 등 국내기업에 우호적 여건이 형성되며, 의약품을 중심으로 수출증가세 지속
  - 바이오헬스 부문의 3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한 1,408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증가세
  - 의약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2%, 전월대비 2.0% 증가한 935백만 달러로, 2023년 이후 완만한 전년동월대비 성장세 지속

〔표 1〕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

구분	`24.08	`24.09	`24.10	`24.11	`24.12	`25.01	`25.02	`25.03
화장품 (증감률)	824 (17.9)	911 (10.5)	1,033 (35.8)	908 (17.7)	875 (25.5)	746 (-5.8)	877 (23.7)	966 (24.4)
바이오헬스 (증감률)	1,279 (38.8)	1,236 (9.9)	1,236 (18.5)	1,438 (19.2)	1,267 (-2.5)	1,146 (-0.5)	1,353 (16.1)	1,408 (6.9)
의약품 (증감률)	864 (73.9)	805 (19.7)	786 (25.4)	960 (35.6)	747 (-4.9)	797 (10.8)	917 (25.1)	935 (13.2)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5.04.01)'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17)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5.04.01.)'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5.04.02.) 참고.

○ **(전국)** 생산 및 수출 통계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생산 경기는 다소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의약품 생산 및 바이오산업 전체 수출액은 꾸준한 증가세

- **(생산지수)** 2025년 2월 국내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는 기준치(100)를 밑도는 부진한 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약품 생산지수는 `24년 하반기부터 둔화세
  - 화장품 관련 전국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4.3% 감소,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84.5로, `22년 6월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진 이후 보합세 유지
  -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2.1%, 전년동월대비 10.8% 증가한 147.3으로 기준치 이상의 생산지수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나, 2024년 하반기 이후 소폭 둔화하는 추세
- **(품목별 수출액)** 2025년 3월 바이오산업 수출 총액[18]은 전년동월대비 18.6% 증가한 190.3천만 달러 수준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세 품목별 수출 경기는 차이
  -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4.4%,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하며 지난 `24년 12월~`25년 1월 사이 소폭 하락했던 수출이 다시 증가
  - 기타 화장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9.6%, 전월대비 31.5% 감소하며, 월별 수출액의 등락이 반복

○ **(인천)** 인천시의 바이오산업은 생산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액의 변동이 커지는 추세

- **(생산지수)** 2025년 2월 기준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한 117.6,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8% 증가한 269.1을 기록하며 전국 추세에 비해 다소 안정적인 흐름
- **(품목별 수출액)** `25년 3월 인천시 바이오산업의 총수출액은 18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증가하며, 완만한 성장세
  -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5.5%, 증가하며, `24년 10월 이후 지속되던 수출액 감소세가 증가 전환
  -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하는 등 `23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타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80.7% 증가한반면 전반적인 성장세는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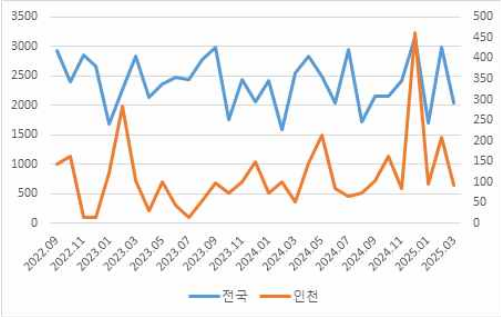
〔표 2〕 국내 바이오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

지역	항목	`24.11	`24.12	`25.01 (p)	`25.02 (p)	`24.02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화학물질 등 제조업	89.2	91.2	88.3	84.5	83.2	-4.3	1.6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83.4	79.7	74.9	79.1	73.5	5.6	7.6
	의약품 제조업	152.1	155.8	144.3	147.3	137.5	2.1	10.8
인천	화학물질 등 제조업	117.4	115.3	108.8	117.6	106.9	8.1	10.0
	의약품 제조업	264.7	295.1	272.7	269.1	212.2	-1.3	26.8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지역 자료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18) 화장품(MTI2273), 기타 화장품(MTI2279), 의약품(MTI2262)의 수출액을 더한 합계값을 의미.

[화장품(MTI2273)]



[기타 화장품(MTI2279)]

[의약품(MTI226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바이오 품목별 수출 동향(2025.03)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5.03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106.204	8.3	181,401	8.9	75,197	21,748	36.5	18,698	3.1	-3,050
자동차	17,104	0.6	80.891	2.6	63,787	1,008	-24.1	7,385	0.6	6,378
기계장비	69,368	24.8	74,303	5.9	4,935	6,264	13.9	5,074	-3.8	-1,190
바이오-의약	7,866	-8.2	7,668	17.8	-197	1,157	-21.5	5,271	18.8	4,115
바이오-화장품	1,853	6.6	9,401	25.4	7,548	29	9.7	1,625	21	1,596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경제 정부, 12조 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마련하여 국회 제출 +

#기획재정부

○ 정부는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추경예산은 주로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3가지 중점 분야 사업에 활용될 예정

- 정부는 대규모 재해 및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내수회복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구분	추경안	주요 내용
재해·재난 대응	3조 원 + α	• 재해대책비(5천억 원) 2배 이상 보강 • 임대주택(1천 호), 주택복구 저리 자금 • 산림헬기(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48대)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 원 + α	• 관세피해·수출기업에 정책자금 25조 원 이상 공급(기존+신규) • 수출바우처 지원기업 2배 이상 확대 • AI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재정지원 2조 원 이상 확대
민생지원	4조 원 + α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연 50만 원 규모) •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자에 대한 '상생페이백 신설' •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 정책자금 2천억 원 확대

경제 5월 1일부터 변경된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적용 +

#국토교통부

○ 고속버스 노쇼(No-Show)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안)'이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 시작될 예정

- 그간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출발 직전·직후의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 문제가 다수 발생
- 이에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승차권 확보 편의와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의 출발 전·후 수수료를 현실화한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평일(월~목) 10% △주말(금~일, 공휴일) 15% △명절(설·추석) 20%로 차등화하고,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3시간 미만에서 출발 직전으로 확대 조정
  - 또한 버스 출발 후 재판매가 불가능한 승차권 특성을 고려하여,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25년 50%, '27년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금융 금융위, 지역·서민금융 부문에서의 저축은행 역할 확대 추진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금융을 공급하는 저축은행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발표

- 금번 방안에는 △지역·서민금융 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등을 포함하였으며, 올 하반기 중 저축은행 규제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지역·서민금융 공급 확대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	• 사잇돌 대출 공급 요건을 '신용하위 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선 •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 고도화 •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확대
	수도권 여신쏠림 완화	•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수도권 90%, 비수도권 110%로 개선 • 지역재투자 평가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추진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추진 • 중소형 저축은행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 •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엄격한 현행 M&A 기준을 한시적(2년간) 완화 •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해 1조 원 이상의 PF대출 정상화 공동펀드 조성 • 저축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중앙회 차입한도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

금융 보다 저렴하고 도움되는 5세대 실손보험, 2025년 말 출시 계획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따라 2025년 말부터는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

- 금융위는 과다 의료서비스 유발 및 지속 인상되는 실손보험료 등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번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
  - 금번 제도 개혁에 따라 급여 의료비는 입원(20%)과 외래(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연동)로 구분하여 실손보험의 자가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임신·출산을 보험 영역으로 포함하여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보장 강화)과 비중증(자기부담 상향)으로 구분하여 보상한도·자기부담·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하며, 4세대 보험의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비중증 비급여에만 적용
  - 또한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실손보험 공시를 강화하는 등 실손보험 관리·운영 체계를 개선할 계획
- 금융위는 '25년 말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부담 감소 및 보험료 체계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산업 산업부,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신속 진입을 위한 조기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3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 중

- 동 사업은 기술확보의 형태 및 특성에 따라 ①글로벌 수요연계형 연구개발(R&D)과 ②글로벌 기술도입형 연구개발(R&D) 등 2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금년에는 신규·계속 과제를 통틀어 357억 원을 지원
  - 수요연계형 R&D는 국내기업이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의 해외기업으로부터 제품 및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면 이에 대한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과제로, 국내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안착을 지원
  - 기술도입형 R&D는 국내기업이 해외 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M&A·IP인수·지분확보·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입할 경우, 이를 활용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
- 금년부터는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KOTRA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우리 기술기업의 매치메이킹을 주선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
  -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산업 정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선점을 위한 관련 분야 투자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의 국내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한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

- 산업부는 동 방안에 따라 △인프라 구축 △소부장 투자지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재정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국내 신진 석·박사의 일경험 확대 및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

구분	주요 내용
인프라 구축	•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 국비 지원 •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 500→1,000억 원 확대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 50~50%로 상향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 생산 중소·중견기업 대상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 지원(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개 산업, 기업당 200억 원 한도) • 기존 반도체 저리대출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을 통한 반도체 분야 20조 원 이상 투자('25~'27) • 반도체 중소기업 기술보증바율(85→95% 이상) 및 한도(100→200억 원) 확대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
차세대 반도체 개발	• 공공인프라 내 팹리스의 AI반도체 실증장비 구축 확대('25~'26)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미니팹 구축을 통한 소부장기업 실증 지원 •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팹리스 5개사 추가 지원(총 20개사) • 국산 AI반도체 조기상용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확대

산업 '2025년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신청 기한 오는 5월 12일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 먹거리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초격차 기술확보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추진하는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의 신청 기한이 오는 5월 12일 마감될 예정

- 동 사업은 앞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AI·첨단바이오 등 성장 초기분야의 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혁신기술 분야의 전략적 연구·실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금번 사업에서는 △AI(기판용 TGV 기술, 미래모빌리티 부품 DX) △첨단바이오(mRNA/LNP 핵심소재, CAR-X 세포치료제 핵심기술) △미래소재(UAM 열가소성 프리프레그, 금속소재 실험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야 6개 과제에 각각 4년간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
  - 금번 사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비영리기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 대한 일괄 협약 체결 후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별 계산을 지원할 예정
- 사업 신청은 4월 11일(금)부터 5월 12일(월)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공고를 확인 가능

지역 스마트서비스 개발·실증할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

#국토교통부

○ 지난 3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2025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의 공모를 시작

- 금년에는 ①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②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③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④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4가지 사업유형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

  * 2025년 처음 공모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선도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

  - 동 사업에 관한 상세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구분	거점형	강소형	솔루션 확산	특화단지 조성
선정 지자체 수	1개	3개 이내	5개 이내	1개
지원대상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인구 100만 이하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인구 30만 미만 시·군·구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추진체계	지자체 주관, 기업 참여	지자체 주관, 기업 참여	지자체 단독	지자체 주관, 기업 참여
사업기간	3년 ('25~'27년)	3년 ('25~'27년)	1년 ('25년)	3년 ('25~'27년)
사업비(국비지원)	320억 원 (최대 160억 원)	160억 원 (최대 80억 원)	24억 원 (12억 원)	160억 원 (최대 80억 원)
신청서 접수기간	'25.5.19(월)~21(수)	'25.5.19(월)~21(수)	'25.4.14(월)~16(수)	'25.5.19(월)~21(수)

참고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자본시장의 변화와 발전 과제」, 자본시장포커스, 2022.01.17.
- 세계법제정보센터, “파리협정(Paris Agreement. Paris. 12 December 2015)” 원문번역본.
- 한국금융연구원, 「탄소중립 현황과 금융의 역할 및 과제」, 금융브리프 논단, 2023.02.18.
- 환경부, 「파리협정 함께 보기」, 2022.03.
- Green Finance Platform, www.greenfinanceplatform.org.
- UNEP, “Green Finance”.
- Chartered Banker, “What is Green and Sustainable Finance?”, 2023.05.31.
- 한철, 「기후금융과 기관투자의 역할」,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3호, 2017.
-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www.gmi.go.kr.
- Hogan Lovells, 「Debt Capital Markets - Global Insights Spring 2020」, 2020.02.21.
- Market.us, 「Global Green Finance Market Report By Type」, 2024.08.
- 국회예산정책처,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국제 비교 연구」, 2024.12.
- ESCAP, 「Green Taxonomy - A Guidance Note by UNESCAP」, 2022.
- ECOFACT, “Green Taxonomies Around the World: Where Do We Stand?”, 2022.11.01.
- 경기연구원,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금융, 그린뱅크」, 2022.08.
- Mission Innovation, explore.mission-innovation.net.
- The Global Climate Action Partnership, globalclimateactionpartnership.org.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 2024.12.
- 국회도서관,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4.07.16.
- UNFCCC, 「Technology and the UNFCCC - Building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기후테크 산업 동향 및 우수기업 사례를 통해 본 성공 전략」, 2024.02.01.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누구나 알기쉬운 탄소중립 녹색성장」, 2024.09.10.
- World Economic Magazine, “How the Global Climate Tech Market is poised for Unprecedented Growth”, 2024.08.11.
-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www.ctis.re.kr.
- PwC, “State of Climate Tech 2024 - Seeking an edge as deal-making slows”, 2024.12.03.
- UN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www.ctc-n.org.
- TRELLIS, “25 Climate Tech Startups to Watch in 2024”, 2024.09.17.
- Climate Insider, “Climate Tech Market Maps - Food and Agriculture”, 2023.11.07.
- VentureRadar, “Top carbon monitoring Start-ups”(검색일: 2025.04.24.).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기획재정부, www.moef.go.kr.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 환경부, www.me.go.kr.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25년 1분기 화장품 수출 26억 달러...역대 최대”, 2025.04.02.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대규모 재해·재난에 보호””, 기획재정부, 2025.04.15.
-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5.04.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10%→15%·20%…“노쇼 방지””, 국토교통부, 2025.03.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축은행 ‘지역·서민금융 역할’ 강화…중금리대출 확대·인센티브 부여”, 금융위원회, 2025.03.20.
- 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03.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세대 실손보험 연말 출시…중증보장 강화, 보험료 30~50% 저렴”, 금융위원회, 2025.04.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신속 진출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25.03.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도체 투자 33조 원으로 확대…송전선 지중화에 70% 국비 지원”, 기획재정부, 2025.04.15.
-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 2025.04.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업부, 성장 초기 핵심 소부장 기술확보에 4년간 600억 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25.04.09.
- 산업통상자원부, “도전·혁신적 미래먹거리분야 소재·부품 기반구축사업 신규 추진”, 2025.04.0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똑똑한 도시’ 만든다… ‘2025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2025.03.17.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5-04호(2025.04.25)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5년 04월 25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